전북농민들 벼 '수발아' 피해로 이중고

도내 피해 면적3400ha · 물량 4,000여톤… 도, 정부에 벼 피해물량 전량 매입 건의

전북농민들이 쌀값 폭락에 애를 태우고 있는데다 벼 이삭에 싹이 트는 등의 피해가 확산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벼 수발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선제적으로 정부에 수발아 피해 벼 전량 매입을 건의했다.

수발아는 벼가 수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벼 이삭에 싹이 트는 현상으로 벼가 여물어가는 시기에 태풍이나 강우로 침관수 또는 도복돼 장기간 이삭이 젖어 있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이번 수발아는 강풍과 잦은 강우, 고온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문제는 도복이 된 벼보다 대부분 벼가 '서있는'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보니 도정 과정에서 낟알의 왕겨를 벗겨내서야 안에서 발아된 상태로 발견되고 있다.

현재 잠정적인 전북지역 수발아 피해면적은 이날 현재 3,408ha로 집계되고 있으며 일반매매가 어려운 피해물량은 4000톤 가량으로 조사됐다.

주요 피해 지역을 보면 부안군이 2,800ha로 도내 피해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익산 283.8ha, 김제 195.4ha, 정읍 60.6ha, 고창 31.5ha 등의 순이다.

전국기능경기대회 해단식 24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북선수단 해단식에 송하진 도지사 및 입상 선수, 지도교사 등 참석자들이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선수단은 종합10위(2013년 14위, 2014년 15위, 2015년 11위)를 달성했다.

농식품부는 일반매매가 어려운 수발아 피해 벼의 경우 정부 매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벼 재해보험 가입농가에는 종전의 중량 환산 방식에서 수발아 피해립 비율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미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힘겨움을 겪고 있다.

조생종 벼부터 3만 원대로 급락하기 시작해 RPC 수매가는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폭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농민들이 우려해오던 쌀값 폭락으로 인한 '쌀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5만2,000원(40kg 기준)으로 책정된 수매가는 올해 3만8,000원으로 급락한 상황이다.

도내 농협에서는 우선 이 비용을 지급하고, 향후 전국 벼 수매가를 고려해 추가금을 정산해주기로 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최종 가격이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가격(1등급 벼 40kg 기준)인 4만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농민들은 수확기의 논을 뒤집거나 전북도청에 나락을 적재하는 등의 농성으로 자신들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던 상황이다.

도는 미질 저하로 일부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서 매입이 불가한 수발아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서 수발아 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의 근심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수발아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 벼 전량을 정부에서 매입하도록 건의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 감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미래 성장동력 국책사업 28건 발굴 · 추진

'국책사업 발굴 포럼' 최종 보고회… 동부권 등 6개 분야 28개 사업 총 5조 2,722억원 규모

전북도는 미래 성장동력인 국책사업을 발굴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미래 전북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16년 국책사업 발굴 포럼'을 운영, 총 28개 사업을 발굴해 도지사 주재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전북도와 전북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도 실국-전북연구원-전문가 등으로 6개 분과, 48명으로 국책사업 발굴 포럼 위원을 구성 후, 분과위 중심의 아이템 발굴(40건) 등으로 선정된 28개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이전과 달리 포럼의 분과위원장을 도 실·국장이 맡아 아이템 발굴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리적 여건으로 그동안 국책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동부권 지역의 사업 발굴을 위해 '동부권 분과'를 별도로 운영, 6건의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된 국책사업은 농업농촌, 문화관광, 지역개발·SOC, 산업경제, 융·복합, 동부권 등 6개 분야 28개 사업으로 총 5조 2,722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발굴된 사업들의 특징을 보면 ▲3D프린팅·지능형 농기계·하이퍼루프·애니멀헬스케어 등을 주제로 전북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개발 사업(4건 4,880억원), ▲도 강점과 여건을 활용하기 위한 백제문화·태권도의 상품화와 농식품·신재생·농업자원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6건 4,430억원)이 채택됐다.

또한 ▲최근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로 스포츠·산재·교통·농업인 등 안전분야 사업의 발굴(3건 1,160억원)과 ▲신규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경제·실버 분야의 사업(5건 2,700억원), ▲노령산맥·섬진강·국가정원을 주제로 한 토탈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5건 2,508억원) 등이 발굴됐다.

도는 앞으로 미래비전에 용역에서 제시된 전략과제 40건과 국책사업 발굴 포럼에서 발굴한 사업 28건 등 총 68건에 대하여 전북형 사업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토론을 통해 사업내용을 가다듬고, 중앙 정부에는 2017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국가정책에 반영토록 방문 설명 등 실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복안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송 지사는 "도와 전북연이 협력해 전북 발전을 견인할 국책사업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2017년 대선 공약 연계와 2018년 국가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 부합, 당위성, 사업효과성 등에 대한 구체적 논리를 개발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고민형 기자

개헌 지원 정부조직 어떻게 운영될까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만들 듯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남은 임기 내에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정부 내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구성과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87년 10월 9차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이 마련된 이후 개헌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07년 1월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한 협의체 형식의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당시 지원단은 같은 해 3월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시안을 발표하고, 4월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정치권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끝내 개헌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당시 일각에는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하향식 개헌 논의'에 정부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는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앞선 1987년의 9차 개헌은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정부 내에 개헌 지원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써는 총리실 산하에 조직을 만들어 법제처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시정연설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조직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점도 대통령 직속 기구 구성 가능성을 키운다.

지난 1980년의 8차 개헌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그해 3월 발족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 헌법개정심의위원회는 9월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최종안을 확정했고, 국회 의결 없이 국민투표만 거친 후 10월에 공포했다.

김 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 지원 조직'과 관련해 기본적인 안이 마련됐고, 이에 대한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에 비춰볼 때 정부 내 개헌 지원 조직을 꾸리는 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군산시, 전북도 시장 · 군수협의회 개최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 순창군수)는 24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서 민선6기 3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를 갖고 당면 현안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근대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이날 정기회는 문동신 군산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협의회 추진사항, 주요 안건심의, 시군 홍보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간 5% 임대료 상습인상 억제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지역발전특별회계 체육진흥시설 지원 보조율 상향 조정',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시군 건의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참석한 시장·군수들의 전원 합의로 의결 처리했다.

이는 전라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간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내 14개 단체장들의 협의회로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병무청, 11월1일 재징병검사

전북병무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간 재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대상자는 2011년도에 최초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으로 300여명이 해당된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재징병검사란 병역처분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본인의 재징병검사 일시를 확인해 반드시 징병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